

# 大學의 社會的 責任과 學園의 自由

梁 性 喆  
(慶熙大 平和福祉大學院)

오늘날 한국 대학의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자율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의 네 가지 기본 자유의 확보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이는 교수 임용의 自律 확보요, 교과 과목 및 교과과정의 自由와 自律 확보이다. 또한 교수 방법, 학생 선발 및 입학 기준의 自由와 自律 확보 역시 한국 대학의 學問의 自由와 學園 自律의 전제 조건이다.

## 1

美 대법원 판사였던 펠릭스 프랑크퍼터(Felix Frankfurter)는 대학의 네 가지 기본 자유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라고 규정한다. 이를 되풀이 하자면 교수 임용, 교과과정 및 과목의 선정, 교수 방법, 학생 선발 및 입학 기준이 대학의 4대 기본 자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기본 자유도 실재는 많은 한계와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대학이 그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대학 ‘안’에서 다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대학 ‘밖’의 제재와 제약이 있고 또 거꾸로 밖에서 안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대로 올바르게 터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필요한 간섭과 간여가 있기 마련이다.

대중 학원의 자유는 크게 학문, 즉 진리 추구와 연구 조사 활동의 자유, 대학 운영의 자율,

그리고 학원의 정치적·사회적 중립성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理想으로서의 학원의 자유와 현실로서의 학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 사이의 괴리가 가져다 주는 갈등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 어느 대학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중 첫 문제점인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 문제만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학문의 자유는 단순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는 사상의 자유 등의 반영이나 그 연장이 아니고 대학의 근본 목적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대학이 그 기본 과제인 교수 임용, 학생 선발, 교과 과목, 교과과정 형성, 대학인 양성, 연구 조사, 기술 자문뿐만이 아니고 전쟁과 평화, 환경 보호, 보건 위생, 사회 신분 보장, 인권 확장 등 인간의 내·외적인 모든 문제를 두루 다루는 것이라면 학문의 자유는 그 주춧돌이 아닐 수 없다. 영어로 대학(University)

의 어간이 우주(Universe)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주가 시공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과 같이 대학의 기본 사명인 진리 추구나 연구 조사 활동도 시공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무한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은 진리 추구하고 연구 조사의 광장이요 '삶의 우주'인 셈이다. 대학이 하나의 단체로서 기업적인 요소를 다분히 갖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목적이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탐구에 있다는 것이 바로 다른 단체나 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더구나 대학은 다른 사회·정치 단체나 기구가 수직적 위계 질서인 것과는 달리 대학교 직원, 교수, 학생의 관계가 수평적인 권한과 역할의 분할 관계(shared authority)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도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기본권의 하나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의 한 고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이러한 자유의 깊은 이해와 확신 없이는 학문의 자유를 누릴 수도 또 이 자유의 침해를 방어·방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밀(John Stuart Mill)은 「자유론」(On Liberty; 1859)에서 인간의 행위를 나에게만 미치는 것(self-regarding)과 남에게까지 미치는 것(other-regarding)으로 나눈 다음, 나의 자유 추구는 남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장된다고 본다. 속어로 “내가 내 손을 휘두를 수 있는 자유는 남의 코 끝머리에서 그친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내가 내 손을 아무렇게나 쓰고 흔드는 것은 자유나 그 자유가 남의 코를 때리는 자유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밀(Mill; 1806~1873)은 자유의 궁극적인 상대성을 인정한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며 남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남의 것을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자유를 ‘내 몸과 마음에 관한한 내가 주인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학문의 자유의 근본이 되는 異見의 자유 또는 異見의 권리(the right to dissent)를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만약 한 사람을 빼놓은 전 인류가 한 가지의 견이요 꼭 그 한 사람만이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전 인류가 그 한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

은 그 한 사람이 전 인류의 의견을 묵살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는 것은 바로 묵살하는 쪽의 不謬性(infallibility)을 가정하는데, 오직 神만의 불류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신이 아닌 인간일 수밖에 없는 묵살하는 쪽의 불류성을 인정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아무리 한쪽 의견이 절대적 다수라 하더라도 그 절대 다수의 인간들이 ‘神’이 아니고 또 될 수 없다면 이들 의견이 오류가 아니라, 오류가 될 수 없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가 묵살해 버린 꼭 한 사람의 異見이 옳을 수도 있고, 설령 모두 다는 옳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옳을 수도 있으며, 만약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 틀린 의견이 허용됨으로써 옳은 의견이 독단·독선이나 편견으로 퇴락,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異見의 자유’는 절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Mill의 異見의 자유의 역설에 훨씬 앞서 밀톤(John Milton)도 그의 저서 *Areopagitica*(1644)에서 특히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1643년의 법령에 항의하여 밀과 거의 비슷한 논지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역설하고 있다. 이른바 검열(censorship)에 관해서 영국이 낳은 이 大詩人 밀톤(1608~1674)은 도대체 몇몇 사람의 검열 위원(members of the star chamber)이 앉아서 이런 얘기는 되고 저런 얘기는 안 되고, 이 책은 출판이 허용되고 저 책은 출판이 허용 안 되고 하는 극히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신의 모독’이라는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은 더 큰 신의 모독죄라고 못박는다. 왜냐하면 이들 몇몇 사람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것을 恣意로 결정한다는 얘기는 그들만이 진리를 전유·독점하고 있다는, 즉 불류성을 전제하는 것이 되고 만약 오직 神만이 전지전능한 불류성을 지닌 존재라면 그러한 행위는 신의 불류성에 의 정면 도전이요 따라서 神에의 모독이라고 주장한다.

오권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焚書, 禁書는 독재 전횡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에의 정면 도전인 것이다. 학자들의 정치 비평을 하기 위한 진시황의 焚書坑儒이든, 신의 모독 행위

방지라는 이름의 17세기 영국의 금서 조치이든, 안보라는 이름의 금서, 불온물 처리이든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 자유의 하나인 사상·표현의 자유, 대학의 기본이 되는 학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두가 다 史的 오점이요 오류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다.

## 2

구체적으로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연류성에서 네 가지 보기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때 미국에서 크게 문제가 된 것 가운데 이른바 흑인 학생이 백인 학생에 비해 연구 조사 결과 I.Q.가 낮은 것은 선천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주장한 노벨상 수상자인 쇼클리(William Shockly)나 제슨(Arthur Jensen) 교수가 강단에 설 때마다 학생들이 이들을 인종 차별 주의자로 몰아 온갖 야유와 욕설을 퍼붓고 일부에서는 이 두 사람을 학문과 인종 차별주의를 연결한 사악한 인간으로까지 몰아 붙인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밀톤이나 밀이 역설한 바와 같이 그들의 주장이나 異見이 묵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 異見을 반대하는 의견의 존중도 중요하지만 그들 異見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지·방해하는 것은 그들 사상·표현·언론 자유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異見 때문에 그들이 대학의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되고 또 그들이 항시 신변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므로 해서 이 문제는 단순히 학문의 자유 문제라는 범주를 넘어서 사회 문제화되고, 또 사회 문제화되므로 인해서 학문의 聖域인 대학에 사회(경찰)가 간여하게 되고 때로는 경찰이 학원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불상사를 낳기도 했다. 이와 같이 학문 연구나 조사가 자연과학과 같이 그 연구 대상이 인간이나 사회 집단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 특히 인종 문제와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두 개의 가치—학문·학원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상충과 갈등을 쉽게 낳을 수 있다.

둘째로 대학인의 연구 대상이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만약 연구 대상이 전쟁과 직결되는 (핵)무기 생산 기술에 관한 것이거나 유전공학과 같이 새로운 생명체의 유기적 생성 연구가 가져 오는 수 많은 미지수나 불확실성, 불가예측성, 또는 일부 정치 세력과의 유기적 관계의 일환으로서의 연구·조사 등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학문의 자유라는 기본 틀 속에서 보호·보장받아야 되며, 또 역으로 사회적 책임과 共同善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연구나 조사 활동이 견제 또는 조정되어야 하는나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학문의 자유, 크게는 대학의 자율과 자유도 사회 속의 眞空管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이 사회의 구성체이고 또 사회의 중요한 책임과 봉사 임무를 차지하는 것이라면 대학의 뿌리인 사회 자체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이, 학원이 거부·부정·배제하는 것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 탈을 쓰고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자율을 간섭·통제하는 반학문적 행위이지 결코 대학이 의당 가져야 할 중요한 사회 구성체로서의 책임과 역할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디까지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고, 어느 선까지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대학의 자유와 자율을 침해하는 행위나 조치인가를 구별·식별하기가 쉬운 일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두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가치라는 기준에서 출발할 때 참다운 학문의 자유와 학문의 자율 그리고 대학의 사회적 사명과 책임이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세째로 대학인, 즉 교수, 학생, 학교 요원의 사회·정치 참여다. 즉 어디까지가 개개인으로서의 사회·정치 참여가 학문의 자유, 학원의 자율이라는 테두리에서 보장되고 또 보장될 수 있는나 하는 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문제는 대학이 갖고 있는 특이성·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추구하는 기본 과제가 현실 사회나 정치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상아탑으로의 孤高性을 견지하려는 求心力과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連帶性을 유지하려는 遠心力 사이에 항상 팽팽한 힘 겨루기를 계속하게 된다. 끝내는 대학을 안에서 지키는 대학인들이 그들의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자

울의 영역을 견지하면서 또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한계를 완수할 때, 그리고 대학을 밖에서 지켜 보는 사회 역시 대학의 기본적인 자유와 자율을 바르게 인정하고 보호하며, 쓸데없는 간섭과 무모한 간여를 최소화할 때 대학은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대학인은 대학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겠다. 다시 말하면 대학은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의 小宇宙일 뿐만 아니라 크게는 그 나라와 그 국민의 성숙도를 저울질하는 척도가 된다.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자율의 정도는 바로 그 나라와 그 국민의 성숙도와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이지만 역으로 얻으려는 쪽과 앗아가려는 쪽의 쟁취 방식이 또한 그 나라 대학인 그리고 그 국가 그 민족 그 사회의 정치 문화의 성숙도를 드러내는 것이겠다. 대학인의 대학 문화가 그 나라의 정치·사회문화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일부이기 때문이다.

### 3

다음에는 좀더 우리의 마음과 몸에 와 닿는 오늘 우리 대학의 현실에 관해 몇 마디 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몇 일 전 S대 어학연구소장으로 있는 옛 친구 P교수를 따라 그 연구소 소장실을 들어가려다가 문득 그 소장실 바로 옆 빈 자리에 가득 쌓인 빈 맥주 병 상자들이며 기타 화염병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등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아연 놀라 왜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의 놀라는 표정이 대수롭지 않은 양 “그것 제거했다가 큰일 나려고!” 하면서 오히려 이 簡易 화염병 제조장, 제조 참고가 마치 신성 불가침의 聖域인 양 가법계 넘기는 P교수에게서 나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또 요새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의 임시 관계로 서울 시내 많은 대학들을 돌아다니며 하나 강하게 느낀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대학의 본연의 자세인 학문 연구와는 정반대의 살벌한 분위기였다. 이들 대학에서 대학이 앗의 터전이요 앗의 시공을 넓히고 높이고 깊게 하기 위한 小宇宙라기보다는 마

치 사회·정치 투쟁의 ‘場’인 인상을 받았다면 너무 지나친 과장일까? 마침 Y대를 들렀을 때는 도서관 앞에서 수십 명의 학생이 다음 날(11월 5일) 대학생 쫓기 동원을 위해 기함을 토하고 있었고, D대(11월 8일)를 들렀을 때는 “총장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백 명 가량의 학생들이 깃발까지 들고 한 건물을 오르내리며 성토를 벌이고 있었다. 단순히 이들 데모 학생들만이 아니라 학교 건물에 무수히 붙어 있는 온갖 전시물들, 학교 주변에 걸리고 붙이고 또 즐비하게 버려진 현수막, 벽보, 인쇄물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어수선하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대학이, 대학인이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자율을 만끽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와 함께 언제부터 왜 이러한 대학의 모습과 분위기가 조성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대학과 대학인이 가져야 할 권위와 증지는 커녕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생이 하나의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고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니고 집권 세력에서의 성토와 반정부 투쟁의 이수라장으로 탈바꿈하게 된 그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되물게 된다. 물론 이러한 회의와 의문에 대한 풀이는 쉽게 나올 수도 또 풀릴 수도 없는 것이겠다. 그러나 과연 언제까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학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심각히 그리고 신중히 고려해야 할 당면 과제인 것이다. 먼저 대학생의 답변을 경청하면 대충 이런 논리인 것 같다.

한국의 학생 정치 운동은 멀리는 4·19 또는 3·1 독립 운동으로까지 올라 갈 수도 있겠지만 요즘 대학생들의 주장은 대체로 5공 등장 과정에서 빚어진 光州 민주화 운동 그리고 5공 비리 등에 초점을 두고 쟁권권이 퇴장하는 데, 특히 6·29선언이 나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낸 것은 민주 투사 내지는 투쟁 세력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수 많은 동료들이 분신 자살을 하고 최후탄 피해를 입고 감옥을 가고 하는 동안에 그들의 스승인 교수들은 대부분 ‘침묵’ 또는 ‘방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라고 교수들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는 지론이

다. 즉 교수의 권위나 지도력이 이제는 있지도 않고 또 있어도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총·학장, 보직 교수 임명이 이제까지 학외와 정부 차원에서 학원과는 관계없이 정부에의 충성도나 현실 정치 관련 여부로 지탱됨으로써 학원의 자율성이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또 파괴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대학과 대학인의 자율을 위한 自救策이 무엇이었느냐고도 반문한다.

한편 교수들은 옛날 스승·제자간의 돈독한 관계를 상기하면서 땅에 떨어진 그리고 敵氣에 찬 교수·학생 관계를 통탄하는 울분복고주의자, 사회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고 대학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안일체념주의자, 학생들의 활동은 아랑곳 없이 나름대로의 연구와 활동에 전념하는 직능분업주의자, 무언가 새로운 대화의 장을 열고 또 학생들의 사고나 욕구를 충족해서 다른 차원의 교수·학생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개혁주의자 등등 교수도 여러 갈래가 있겠다. 물론 내가 봉직하는 학교의 도서관을 밤에, 때로는 꽤 늦은 밤에 산책하면서 느끼는 것이이지만 오늘의 대학의 대학생이 모두가 다 이른바 '운동권'이 아니며 수 많은 학생이 도서관에서 밤이 지새는 줄도 모르고 무언가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본다. 이는 꼭 이 대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학들의 절대 다수 대학생들의 모습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수가 소수이든 아니든간에 거의 매일 마이크를 대고 대정부 또는 학내 문제를 놓고 고향과 성토로 온갖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이 대학마다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자율이 획일적인 대학 분위기나 사고 방식을 단연 배제·거부하고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허용·관용하는 복합 주장과 다원 사고 양식의 배움터라면 일부 과격한 학생들의 불멘 소리의 주장과 행위까지도 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 주장을 고수하고 남에게 설득하고 또 그러한 주장을 실천하는 것은 좋으나 만약에 그러한 주장과 주장의 설득·실천 과정에서 다른 사람, 다른 학생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인 것이다. 더구나 한 부류 학생들의 주장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어떠한 불법·비법 행위나 폭

력 행위도 정당화·합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학문의 자유, 학원의 자율을 외치면서 바로 학원의 정상 학사 운영이나 학문 활동을 결과적으로 방해·저해한다면 그보다 더 큰 자기당착이나 모순이 어디에 있겠는가 스스로 반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더구나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불법·비법 파괴 행위를 다만 사로 한다면 그보다 더 심각한 괴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두 개의 잘못이 하나의 옳은 것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자가당착과 괴리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자유의 생취라는 이름으로 모든 비법·불법 파괴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요컨대 오늘의 한국 대학들은 의당 대학인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나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자율이라는 원 목적과는 거리가 먼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모습이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아침 신문에는 모대학에서 학생들이 학생 문병을 간 학장 대리와 학생처장 두 교수를 강제로 다시 학교로 연행, 두 교수의 머리를 10여 명의 학생들이 합세하여 짚는 비극을 보도하고 있다. 이는 바로 오늘의 한국 대학의 일면, 학생과 교수 관계의 일면,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자율의 척도, 대학인의 사회 참여와 사회의 대학 관여의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겠다. 이대로 계속 끌려 가는 대학은 대학의 기본 사명을 다할 수 없다. 대학은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原目的이다시 새겨지고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자율이 근본적·제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명실공히 대학이 앞의 小宇宙로서 제 모습을 찾고 또 그 제 모습으로 크게 자라고 또 높게 일어서고 깊게 뿌리 박아야 하겠다. 대학은 '폭력'을 낳는 아수라장이 아닌 것처럼 학외 비법·폭력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대학 '안'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학 '밖'의 폭력 정치와 비법 정치도 함께 제거되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폭력의 제거나 거부가 '무법'과 일치하는 사고와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폭력의 제거는 합법의 회복이지 결코 무법이 아니다. 폭력에의 항거는 법치의 회복이지 무법 천지가 아니다. 학내이든 학외이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聖域

의 구축이 아니고 법 질서의 회복이다. 독재에의 항거는 통치의 부정이 아니고 불법·비법 통치의 합법·적법 통치의 代置 요구일 뿐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학원은 무법 천지일 수도 없고 또 무법 천지여서도 결코 안 된다. 화염병 제조장을 학원의 '聖域'으로 방관·방조하는 것은 단순히 위선이 아니고 법치주의 크게는 민주주의 정치의 거부요, 무법 천지에의 방조다. 혹자는 요즘 밝혀지고 있는 제 5공화국의 더 큰 비리, 부정, 부패, 폭력의 정치를 끈질기게 항거해 온 것이 대학생이고 그들의 희생과 투쟁의 노력을 고려한다면, 일부 과격 학생들의 비법·불법·폭력 행위는 그 정도에 있어서 비할 바가 아닐 뿐더러,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더 큰 독재와 폭력'을 저항·제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작은 폭력'일 뿐이며 이 작은 폭력은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큰 폭력이든 작은 폭력이든 폭력은 폭력이며 더 무서운 것은 폭력은 폭력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사실이다. 폭력에의 가장 큰 무기는 무법이 아니고 합법 행위다. 민주주의의 가장 빠른 길은 민주주의적 사고와 행동의 실천수법이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반민주적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아니듯이, 폭력에의 가장 강한 도전과 저항은 합법적 사고와 행동의 실천에 있기 때문이다. 끝내는 학원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는 '밖'의 간섭과 간여를 물리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인이 '안'에서 스스로가 그 자유와 자율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겠다. 이 어지러운 아수라장 같은 학원의 분위기 속에서 학문의 자유의 꽃이 자랄 수 있겠는가? 최루탄 毒氣로 사람의 숨이 막히고 교정의 숲이 시들어 가고 있다. 목멘 소리의 마이크 소리에 귀가 먹어가고, 강의도 수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과연 이것이 대학인가? 과연 이렇게 대학이 굴러가야만 하는가?

#### 4

이상에서 학문의 자유의 일반 이론과 오늘의 한국 대학이 겪고 있는 진통을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자율이라는次元에서 필자가 관찰한 것을 素描式으로 펼쳐 보았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구

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끝 맺고자 한다.

오늘 한국 대학의 학문의 자유, 학원의 자율은 이 글 맨 머리에서 내세운 네 가지 기본 자유—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의—확보를 통하여서만이 얻어질 수 있다.

첫째, 교수 임용의 自律이다. 필자의 분야인 정치학의 경우만을 보아도 거의 배타적인 自校出身任用—他校 출신 배제(academic inbreeding), 임용 기준과 과정의 非合理性, 先後輩 先任·後任 등 권위주의적 위계 질서 등이 뿌리 깊다. 누구나 남득이 갈 수 있는 평평탕탕한 임용 기준뿐만 아니고 그러한 임용 기준에 준거해서 임용되는 것이 단순히 '形式'이 아니고 실천·시행되어야 하겠다. 任用 뒤의 교수 승진 및 평가도 위에서 지적한 인맥이나 학맥 등 前近代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정례적으로(연 1회) 교수들의 연구 실적 평가, 학생들의 교수 평가, 동료 교수들의 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제가 도입되어야 하겠다. 혹자는 한국의 문화나 전통 또는 미풍양속의 이름으로 이를 간단히 일축·거부하는 것을 일삼을 수 있으나 긴 안목으로 보면 바로 그러한 구실로 인해 가장 합리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또 그러한 합리성의 귀감이 되어야 할 학원에서부터 교수 요원 임용·승진·평가가 부조리와 비합리성을 안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더구나 교수 임용이 해당 科에서부터 上向式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밖의 학장—총장 채널은 요식 행위에(특별한 인적·법적 하자가 없는 한) 그쳐야지, 그 正反對 현상인 학교 재단 이사장, 총·학장 등 下向式 결정 과정은 대체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上向式 결정 과정의 경우 학과장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는 科會議에서 임용·승진 小위원회(科가 적은 경우에는 전체 科 교수)를 구성,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표결로 하며 일부 大學에서와 같이 만장일치라기보다는 두서너 사람의 최종 선정자들을 놓고 다수결 原則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교과 과목 및 교과과정의 自由와 自律이다. 이상적으로는 해당 학과 과목 및 교과과정 形成은 그 해당 학과의 주관이어야 되겠다. '이

념교육' 등 문교부가 下向式으로 필수 과목을 결정하여 모든 학교가 이를 따르게 하는 것은 학원 自律에의 변칙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새 과목 설치나 새로운 교과과정 형성은 학원 '안'에서 스스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펼쳐지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런 것이어야 하겠다. 부단한 교수들간의 대화, 학문의 발전과 성장, 사회 발전과의 연루, 학생-교수간의 교수 행위를 거쳐 나오는 것이지 교수 과목이나 교과과정을 어느 外部 특정 기구가 정치적 이유나 學問 外的 근거에 의해서 一方的으로 '강요', '지시'에 의해 추가 변경되는 恣意行爲는 빨리 뿌리 뽑혀야 한다.

세세, 교수 방법의 자유와 자율이다. 위에서도 몇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大學은 삶의 터전이요 小宇宙다. 따라서 대학은 다양성·다원성·복합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 어느 특정 정치 이념이나 固定된 사고의 틀 속에서는 대학의 본래의 사명인 삶의 무한한 추구와 도전이 있을 수 없다. 연구를 하고, 조사·실험을 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교수의 기본 자유요 자율이며 그에 대한 평가는 그의 연구 실적, 학생의 교수 평가, 동료 교수의 평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교수의 교수·연구·조사·실험 등 학문의 自由를 제한하고 간섭하는 어떠한 反學問的 제도나 法은 철폐·제거되어야 한다. 대학은 오늘의 현실과 같이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화염병 제조 공장을 성역으로 취급하는 가치도 괴적 虛像에서 단호히 그 탈을 벗고 바로 이러한 학문의 전당으로서 진리 탐구와 삶의 聖域으로 제 자리를 찾아야 하겠다. 온갖 不法·非法·暴力이 통하는 아수라장으로부터 모든 이론과 이념, 모든 사물과 사상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로이 토론·연구·분석되는 삶의 產室로 제 길을 걸어야 하겠다.

끝으로 학생 선발 및 입학 기준의 자유와 자율이다. 학생 선발 및 입학 기준에 대한 外部의

간여와 간섭은 어떻게 보면 대학이 대학으로서 그러한 자유와 자율을 스스로 실천·실행하지 못해서 自招한 것이라고 볼 수도 물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학과 대학인의 자유와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온갖 불성실, 비리, 부정, 부패도 문제지만 이를 제지하고 감독하고 처리한다는 外部 기구(주무 기관인 문교부)의 恣行, 불필요한 간섭과 간여 또한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으로부터의 개선과 '밖'으로부터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안의 개선 방향은 자율과 자유에 걸맞는 합리적인 운영과 실천, 밖의 개혁 방향은 대학에 대한 최소한의 불간섭·불간여 원칙에 의거하여 이제까지의 定例的·지속적인 간여와 간섭에서 과감히 벗어나 非定例的·비지속적인 調査者·仲裁者役으로의 탈바꿈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입학 기준과 학생 선발은 대학의 자유와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특정 학교가 不法不正행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을 때 事件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紹介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大學 自由와 自律의 폭을 계속 늘리고 넓혀 가야 하는 것을 뜻한다.

대학은 社會 구성체의 중요한 一部이며 社會 完전 참여자의 일시적 준비 기구요 훈련장일 뿐만 아니라 대학은 바로 후대에 등장하는 社會의 교목을 기르는 식물원이다. 식물원의 정상 운영이 적당한 물과 거름과 햇빛을 요구하듯이 대학의 정상 운영은 교수, 학생, 교직원의 三位一體的 조화를 前提로 한다. 그 어느 한 部分도 제 기능을 못하면 대학인이 원활히 커가고 자랄 수 없다. 대학인의 사명 회복과 대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만 대학이 T.S. Eliot 長詩의 타이틀인 「폐허」가 아닌 영원한 삶의 샘터가 될 수가 있다. 대학을 지키는 대학인이나 대학을 지켜 보는 대학 밖의 社會나 아무도 대학이 삶의 터전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대학은 삶의 小宇宙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겠다. \*